

제1호 환경시범마을 조성

“지속적인 산업성장기반 조성”

군산시의회, ‘고용·산업위기 특별지역 지정 연장 촉구’ 채택

익산시, 장점마을 비료공장 개선... 환경개선 사업 추진

익산시가 장점마을을 제1호 환경시범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시는 장점마을 환경개선을 비롯해 다양한 마을 재생 사업을 통해 환경친화도시 구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장점마을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약 204억원을 투입해 12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12가지 사업은 마을 사후관리, 환경개선 등의 분야로 나뉘어 실시된다.

이번 사업들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마을 주민들과 논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전북도와 함께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마을 비료공장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계획을 수립 중이다. 마을 환경오염 사후관리를 위한 용역도 함께 시작된다. 앞서 익산시는 부지 활용을 위해

9억3000만원을 투입해 비료공장 매입을 완료했다.

이와 동시에 마을에 남아있는 각종 오염원 제거 작업도 실시된다. 익산시는 8억3000만원을 투입해 공장 내 매립돼 있는 폐기물 제거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마을 저수지와 인근 논에 대한 오염원 제거 및 복구 작업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환경시범마을로 거듭나기 위한 정비사업도 다양하게 추진된다. 마을 지붕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 32가구가 신청해 절차가 진행 중이며 세대별로 침적먼지 제거 및 복구 작업도 본격화된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80ha를 추가로 조성하고 대체작물로 토양정화 식물 식재를 유도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울 방침이다. 지난해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매도 실시되고 있다.

장점마을을 포함해 장고재, 월인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 지원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원광대병원과 협약해 맺어 진행되고 있는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은 사전 신청한 120명에 대해 실시되며 심리치유와 찾아가는 한방진료 등의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은 1:1 밀착 관리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마을만들기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료공간이 포함된 다목적 주민복지센터가 신축되며 LPG가스 보급,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버스승강장 교체 등으로 건강한 농촌 환경으로 거듭난다.

익산시는 계획된 사업들을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마을 주민들과 추가사업을 발굴해 지역의 대표 환경시범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주민 고통을 잊지 않고 환경의 중요성을 기억하기 위해 장점마을을 제1호 환경시범마을로 조성하겠다”며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청정 익산, 환경친화도시 익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는 20일 제224회 1차 본회의에서 ‘군산 산업·고용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발의한 박광일 의원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세계 3위의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OCI 군산공장 구조조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피해까지 겹쳐 군산경제가 최악의 위기 상황에 몰려 있다”고 주장했다.

또 “2년 전 정부가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군산지역을 전국 최초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을 했지만 현재까지도 군산지역의 생산 및 수출이 90% 이상 급감하고 제조업의 연속되는 가동중단 및 폐쇄로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인구감소는 물론 지역경제는 활력을 잃고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광일 의원

박 의원은 “지금 현실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경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오는 4월 만료되는 군산 산업 및 고용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연장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산지역보다 뒤늦게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거제 등 다른 5곳이 지난해 이미 2년 연장을 확정지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경남과 전남의 경우 조선산업 회복세에 힘입어 생산지수가 지난해부터 반등세로 돌아섰지만 전북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군산시는 그동안 초도화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전기차클러스터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지만 단기간 내 지역경제의 회생은 역부족인 상태이다”며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해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산산업 및 고용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연장 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금융위원장에 송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코로나19 예방 다중이용시설 열화상카메라 설치

군산시, 주기적인 방역소독 실시

군산시가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운영하며 코로나19 예방에 힘쓰고 있다.

20일 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군산역, 군산연안여객터미널, 근대역사박물관, 시립도서관, 금강노인복지관, 군산노인종합복지관에 각각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대중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인 역, 터미널, 공항 등에 대해 주기

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열화상카메라 설치운영으로 인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불특정 다수를 측정하는 열화상카메라에서 경보음이 울리면 근무자는 고막체온계로 대상자를 재측정하고 발열증상 시 즉시 보건소 담당자에 통보 후 선별진료소를 받게 하는 예방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열화상카메라 설치운영은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사랑배달앱 ‘배달의 명수’ 3월 출시

군산시는 사업주와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발한 음식배달앱 ‘배달의 명수’ 시연회를 갖고 최종 점검을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3월 출시될 군산음식배달앱 ‘배달의 명수’는 최근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입비와 광고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배달앱이다.

군산사랑 제1탄 사업이었던 군산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전국적인 성공사례로 지역경제 회생에 희망을 주었다.

시는 상품권 유통기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통한 순환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군산사랑 제2탄 ‘배달의 명수’를 기획했다.

사업주는 가입비와 수수료료를 절감하고, 그 혜택을 소비자에게 환원함으로써 소비자는 할인혜택 등을 받게 되며,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해 할인된 가격으로 음식을 주문해 사업주도 소비자도 윈윈하는 상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달앱을 사용하려는 사업주는 군산시 소재 배달이 가능한 음식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용방법이나 메뉴등록이 어려운 사업주에게는 직접 매장을 방문해 가맹점 등록을 도와준다. 또 소비자는 앱스토어에서 배달의 명수를 설치하고 사용하면 된다.

3월 출시기념 이벤트인 심심+할인(마음과 마음을 더해 혜택이 두배로)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배달의 명수 앱이나, 군산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참조하면 된다. 이밖에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으로 할인혜택을 더하고, 배달의 명수 가맹점이 자체 제공하는 즉시할인쿠폰 등은 연중 지속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연간 고정적으로 지출하던 가입비와 광고료를 절감한 군산만의 음식배달어플인 ‘배달의 명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사업주는 소비자를 위한 착한 가격으로, 소비자는 기존 배달어플보다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배달의 명수 사용으로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인구 문제 해결 정책위원회 개최

군산시는 2020년 인구정책 본격 추진을 위해 지역 인구에 대한 현실을 진단하고 구체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군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윤동욱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국장급 관계공무원 6명, 시의원 및 각 분야별 전문가 8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3월 출범 이후 군산시가 직면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효과적인 인구정책 발굴

을 목표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인구정책 의견을 제시·자문한다.

부시장 등 위원 15명과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 기본현황 보고 및 5개 분야 58개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정책 개선에 대한 건의, 2020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다각적인 인구정책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올해 분야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구정책 실무부서 TF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각 부서에서는 당면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협업을 통해 군산시민의 특색있는 인구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한 인구문제 극복을 위해 군산시·기관·단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양 기관 간 상호협조와 인구정책에 대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 논의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추진

군산시가 시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가입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일부터 시민의 안전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익사 사고, 농기계 상해 사망, 농기계 사고 후유장애, 야생동물 피해보상(멧돼지에 한함) 항목을 추가해 보험을 재가입 운영하기로 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군산시가 비용을 일괄 부담하여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자연재해 및 사고, 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가 보상하는 단체보험이며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에 가입하는 보험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스포츠 교통사고 부상치료(12세 이하),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성폭력범죄 상해 위자료 외에 추가 항목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마무리 박차

익산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의 행정절차를 6월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환경친화도시에 걸맞는 테마형 명품공원 조성을 목표로 익산시가 추진 중인 중장기 사업 중 하나이다.

시는 지난 2017년 9월 민간특례사업 제안 공고를 시작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타당성 검토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2019년 11월 마동·모인·수도산공원은 현재 실시계획인가 추진 및 토지 보상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